

헌 법

1. 비례대표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표(死票)를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이를 살려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진의를 정확하게 의회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데 본래 목적이 있다.
- ② 군소정당의 난립은 비례대표제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 ③ 비례대표제는 선거권자가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을 수반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 ④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봉쇄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 ⑤ 비례대표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로, 직능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탄핵소추의 효과로서 권한행사 정지시기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시점이다.
- ③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④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재산권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기금을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동의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편입한 것에 대하여 연금가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② 헌법재판소는 법원공탁금의 이자를 연 1%로 규정한 대법원규칙에 대하여 재산권침해를 인정하였다.
- ③ 헌법재판소는 강제집행권은 국가 통치권의 한 작용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
- ⑤ 헌법재판소는 도시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제한구역 지정 후에 종래의 목적대로만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4. 의회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등족회의는 귀족이나 승려 혹은 시민계급 등 각자 소속되는 신분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의 회의기관이었지만, 의회는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의 회의기관이다.
- ② 등족회의는 대표들이 기속위임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였지만, 의회는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 ③ 정당국가의 발전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광범한 도입을 초래하였다.
- ④ 사회국가화의 경향은 의회의 통법부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 ⑤ 정보화사회의 발전은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여 현실적으로는 의회를 견제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5.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의 주체성을 부인한 것은?

- [illegible]

6. 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영국의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 ②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는다.
- ③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다.
- ④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 ⑤ 불법체포와 불법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7. 다음 설명 중 **현행 정당법에 의할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 ③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④ 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정당이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8. 헌법상 영토규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독자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를 영토조항에서 찾기도 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북한 국적의 주민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⑤ 헌법은 영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9.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②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 ④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발인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0. 국회의 표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 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

11. 헌법의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헌법개정이나 헌법변천이나 모두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르는 헌법변경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 ② 헌법개정의 형식에는 기존 조항들을 그대로 두고 개정조항만 추가하는 증보방식도 있는데, 미국연방헌법이 그 예이다.
- ③ 헌법개정무한계설은 헌법개정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헌법의 어떤 조항도 바꿀 수 있다는 견해이다.
- ④ 헌법개정한계설은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 ⑤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2.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의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은?

- ①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것
- ② 교사의 신규채용시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
- ③ 미성년자·금치산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
- ④ 공무원시험시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 ⑤ 해외거주자들에 대하여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13. 다음 대통령의 권한 중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 ② 대법관의 임명
- ③ 일반사면
- ④ 감사원장의 임명
- ⑤ 긴급재정경제처분

14. 국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은 원칙적으로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
- ②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 ③ 국회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④ 본회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⑤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15. 처분적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처분적 법률은 집행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 ② 처분적 법률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 ③ 개별사건 법률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곧바로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④ 현대 사회국가에서 처분적 법률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 ⑤ 처분적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할 경우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

16.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②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한다.
- ③ 행정심판은 헌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관하여 정식재판의 길이 열려 있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재판의 심리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⑤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은 법관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행하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17.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처벌 없다’는 말이다.
- ② 죄형법정주의는 자유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 ③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 중 하나이다.
- 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18.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할 때 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목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 ②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③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은 그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라는 내심의 영역을 문제 삼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
- ④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단순히 법위반사실 자체를 공표하라는 것일 뿐, 사죄 내지 사과하라는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⑤ 국가보안법 위반의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하기 전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거절하면 가석방에서 제외하더라도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9. 다음 중 헌법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성별에 의한 차별
- ② 나이에 의한 차별
- ③ 종교에 의한 차별
- ④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 ⑤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여성차별

20. 참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참정권은 국민주권 원리를 구체화하는 기본권이다.
- ② 참정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대리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참정권은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법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④ 헌법재판소는 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하였다.

21. 다음 중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제한이 아닌 것은?

- ① 현역 군인의 국무위원 임명 제한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③ 군인에 대한 군사재판 ④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⑤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

22.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언론·출판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표현행위라는 점에서 개인간의 통신과 구별된다.
 ② 현대 정보사회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로서 파악되기도 한다.
 ③ 집단적 시위는 이동하는 집회로서 집회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결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⑤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된다.

23. 기본권의 양면성(兩面性)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이 순서대로 맞게 나열된 것은?

헷세(K. Hesse)의 기본권에 대한 양면성 이론은 스멘트(R. Smend)에 의해 소홀히 다루어진 (가)의 측면을 다시 강조하여 주관적 공권의 측면과 객관적 질서의 측면을 대등한 위치로 복귀시켰다. 기본권의 양면성이론을 발전시키되 이를 극단적으로 전개시킨 것으로 (나)의 ‘제도적 기본권이론’을 들 수 있다. (다)가 ‘자유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 자유와 제도적 보장을 구별한 것과 반대로 (나)는 기본권의 양면성이론을 바탕으로 기본권의 제도적·객관적 측면을 강조하여 ‘자유는 제도일 수밖에 없다’는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 | 가 | 나 | 다 | 가 | 나 | 다 |
|------------------------------------|---|---|------------------------------------|---|---|
| ① 주관적 공권 - H. Kelsen - G. Jellinek | | | ② 객관적 질서 - C. Schmitt - P. Häberle | | |
| ③ 주관적 공권 - C. Schmitt - P. Häberle | | | ④ 주관적 공권 - P. Häberle - C. Schmitt | | |
| ⑤ 객관적 질서 - P. Häberle - C. Schmitt | | | | | |

24. 사법권 독립의 보장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 ①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의 보장 ② 헌법 및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른 재판
 ③ 법관의 징계에 있어서 면직처분의 배제 ④ 법관의 자유로운 파견근무제
 ⑤ 법관정년 법정제

25. 다음 중 헌법 규정상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감사원의 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② 대법원장의 임기
 ③ 행정심판의 절차 ④ 행정각부의 직무범위
 ⑤ 사면에 관한 사항